

한국 여성평화운동 담론의 한계와 대안

백미연*

본 논문은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위기의 원인을 이론적·실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로컬평화의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평화운동이 채택한 적극적 평화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 평화담론으로 '정의로운 평화'와 '로컬평화'의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또한 엘리트 중심의 하향식 여성평화운동의 접근방식과 다양한 여성과 평화의 목소리에 대한 포용의 부족 등의 실천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로컬과의 대화와 로컬의 주체 포함을 통한 포용적 연대의 정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철학자의 관점'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로컬과 다양성을 적극 포용하여 대화하는 '민주적 관점', '평화운동의 민주화'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한국여성평화운동, 평화만들기, 로컬평화, 포용적 연대, 평화의 민주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I. 서론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한국적 특수성은 평화와 통일을 국가의 핵심 목표로 만들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도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평화에 독립적 가치를 부여하는 학문으로서의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은 1990년대 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¹⁾.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 운동 진영에서도 평화를 보편적이고 독립된 가치로 보기보다는 반미운동과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와 탈북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를 특수한 민족적 문제가 아닌 세계 보편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대안도 통일보다는 평화정착으로 사고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국내에서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곳은 페미니즘 진영이었다(서보혁·정옥식 2016, 110-118). 페미니즘 진영은 남북화해협력, 군사주의,

1)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인 학문적 평화연구는 1970년대 초반 시작되었다. 1974년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1979년 경희대 국제평화연구소, 1981년 인천대 평화통일연구소, 1983년 통일원 산하 평화문제연구소, 1988년 고려대 평화연구소가 설립되었고,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학술지가 창간되었다. 2021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연구소 중 명칭에 ‘평화’를 포함한 연구소는 40개 이상이다(김상대 2021, 50-51). 서보혁은 1980년대 말까지 한국에서 평화연구는 안보연구, 북한 및 통일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1990년대 들어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었고 탈냉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통일교육을 평화교육과 접합하고자 하는 시도와 인권과 평화이론의 연결 등 본격적인 평화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평화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곳은 페미니즘 진영이라고 평가한다. 페미니즘 진영을 제외하고는 학계보다는 사회운동의 현장 특히 생태운동과 풀뿌리운동, 통일운동 등에서 평화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서보혁 2019, 53-57).

전시 성폭력 등을 연구하며, 반전·반핵운동, 군축운동, 일본군위안부·기
지촌여성 대책 활동, 평화/통일교육과 평화문화 확산 운동 등 다양한 평
화운동을 펼쳐왔다(심영희·김엘리 2005, 11-61).

한국여성평화운동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를 중
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단체는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전략을 분단과 통
일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에서 찾아야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에 여
성의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9
년 반핵평화위원회, 1993년 통일평화위원회를 설치하며 남북여성 교류,
반핵운동, 평화구축운동, 일상에서 평화만들기 운동, 반전평화운동을 추
진하였고, 1997년 최초의 여성평화운동단체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창립되었다. YWCA도 북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지원사업 등 대중적
평화운동을 지속하였다(정현백 2021, 199). 한국여성평화운동은 통일을
통한 평화체제구축을 목표로 하였고, 그 과정에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확
대하여, 통일 후 성평등 문제의 주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
고 있었다.

심영희는 “여성운동이 적극적 평화의 여러 영역, 즉 구조적, 직접적,
문화적 폭력의 어느 한 영역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왔다면, 여성평화운동은 기본적으로 소극적 평화를 위한 운동에 초점을
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 평화를 위한 운동을 동시에 펼침으로써
이 세 영역 모두와 연결되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심영희
2005, 17)고 말하며 여성평화운동이 여성운동을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
한다. 여성평화운동은 여성주의 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조
적 성차별과 남성중심주의(가부장제)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페미니즘’
담론을 바탕으로 평화적 방식에 의한 민족통일을 목표로 하는 ‘평화통일’
담론, 갈통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담론을 이론적으로 결합하
였다. ‘여성주의 평화통일’ 담론과 ‘적극적 평화’ 담론의 이론적 결합을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해나간 것이다.

여성평화운동은 2002년 ‘6·15 공동선언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 통일대회’의 개최, 2005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여성본부’ 설치, 2014년 한국정부의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2015년 ‘휴전선을 넘는 여성들(Women Cross DMZ: WCD)’ 운동 등 주목받는 성과를 내왔다. 하지만 여성평화운동 단체들은 2010년대를 거치면서 회원이 급감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여성평화운동의 핵심적 단체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경우도 2010년 전후로 660여 명이던 회원이 2021년에는 200명 남짓으로 감소하였다(김귀옥 2022, 95). 또한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이 주류여성단체와 여성 명망가 등 올드 페미니스트 위주로 진행되면서, 현재 여성주의 논의와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영영 페미니스트 집단과의 소통의 부재로 대중적 기반 확대와 활동성이 점차 약화되었다(김귀옥 2022, 106). 평화의 시대적 요구와 중요성은 더 높아졌지만, 여성평화운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평화운동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적극적 평화’ 담론의 채택과 하향식 페미니스트 운동방식, 젊은 세대 페미니스트 집단과의 소통 부족 등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 평화’ 담론은 전시성폭력 등 젠더폭력과, 여성빈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 등을 구조적 폭력으로, 가부장제 문화를 문화적 폭력으로 읽어내고 운동의 주제를 확대하는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였지만, 불평등과 부정의 이슈 모두를 평화의 주제로, 그리고 여성평화운동의 주제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여성평화운동의 주제와 방향의 모호성을 초래하였다. 또한 하향식 운동방식을 채택하는 여성단체 중심의 올드 페미니스트 전략은 상층부 엘리트 여성의 일관성 있는 방향 지시와 실천 역량의 집중을 통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왔다. 하지만 그러한 성과를 지속하여 확대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을 재생산하는데 한계에 다다랐다. 한국여성평화운동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 다른 평화담론과 또 다른 페미니스트 연대의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사회의 변화된 통일정서와 환경, 다양성의 증대라는 유동적인 한국적 특수성의 맥락에서 한국여성평화운동은 ‘로컬 평화’와 ‘포용적 연대’라는 대안적 담론과 전략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적극적 평화와 한국여성평화운동

한국여성평화운동은 여성통일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은 반전·군축·반핵운동과 반성폭력운동의 병존으로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민족주의 담론을 바탕으로 한 통일운동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인 동시에 민족주의 담론에서 벗어나 반전, 군축, 반핵의 주제를 포함하여 보편적 평화의 가치를 정당화 근거로 삼는 운동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미군 기지촌 여성 등의 이슈를 발굴하며 성폭력 이슈를 일상의 평화, 초국적 여성의 평화 이슈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거칠게 말하면, 한국여성평화운동은 민족주의 담론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담론을 통해 운동의 정당화 담론을 전환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갈통의 ‘적극적 평화’ 담론은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갈통(Johan Galtung)은 ‘전쟁의 부재’를 평화로 바라보는 관점을 ‘소

극적 평화(negative peace)'라고 비판하며, '폭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평화의 의미를 확대하고자 시도했다. 소극적 평화는 물리적·직접적 폭력의 부재를 말하는데, 이는 세력균형, 평화조성 활동과 같은 군사적, 외교적 활동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이러한 소극적 평화와는 구별되며,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the absence of structural violence)이며, 이것이 바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는 것이다(Galtung 1969). 갈등은 '적극적 평화'의 전제조건은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 모두의 부재이며, 간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UNESCO 2018, 30). 갈등의 구조적 폭력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억압 혹은 부정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 폭력에 정당성 혹은 규범성을 부여하는 장치를 문화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Galtung 1990). 갈등은 물리적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소극적 평화에서 사회에 배태된 구조적 폭력까지 근절하는 적극적 평화로 전환하는 다양한 평화적 방법(peaceful means)을 이론화하였다. 평화는 단순히 갈등을 통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수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되고 문명의 전환까지 모색되는 구조적이며 문화적인 과정인 것이다(Galtung 1996, 김태균 2021 재인용). 갈등은 폭력을 감소하고 예방하며 평화를 정착하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차원에서 존재하는 예를 들어, 정치체제, 성, 생활양식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비폭력적 갈등 전환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서보혁 2019, 110).

갈통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Peace by Peaceful Means)』(1996)에서 폭력과 평화를 직접적 차원, 구조적 차원, 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여섯 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에 자연, 사람, 사회, 세계, 문화, 시간 기준을 적용하여, 폭력과 평화를 세분화한다(서보혁 2019, 30). 이러한 구분에 따라, 가부장제는 사회영역의 구조적 폭력 중 하나

로, 성차별주의와 가부장주의는 언어와 예술영역에 속하는 문화적 폭력으로 유형화된다. 성차별과 가부장제, 가부장주의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며, 이러한 폭력의 부재가 적극적 평화인 것이다. 성적 불평등, 성차별, 가부장제(남성중심주의 담론과 질서)에 대한 반대와 그에 대한 극복이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운동의 공통 목표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페미니스트 운동은 적극적 평화 활동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이론과 방향성을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여성평화운동이 소극적 평화운동과 적극적 평화운동을 동시에 펼쳐 왔으며, 적극적 평화운동의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심영희·김엘리 2005; 정현백 2021, 192; 김귀옥 2022, 104). 1970년대 반전 및 군축운동에서 시작한 여성평화운동이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여성인권운동, 통일/교류협력운동 등으로 확대되고 2000년대 들어 일상의 평화문화 확산 운동이라는 적극적 평화운동으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심영희 2005, 49). 이들은 또한 여성평화통일운동도 적극적 평화 개념에 기초하여 운동의 방식과 내용을 결정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정현백 2021, 192). 하지만 전쟁반대와 통일지향의 소극적 평화 지향을 넘어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김귀옥 2022, 104). 그러나 한국여성평화운동이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모두 고려한 적극적 평화 개념을 바탕으로 적극적 평화운동을 지향한다는 것이 반복되고 있을 뿐 무엇이 구체적으로 적극적 평화의 방향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들의 저술에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에 관한 해석을 찾을 수 있다. “전쟁반대와 통일지향의 평화가 소극적 평화”(김귀옥 2022, 104), “통일을 통한 평화’가 소극적 평화”(심영희 2005, 53), “통일은 구조적 폭력을 해결하려는 시도이고 평화는 구조적, 직접적, 문화적 폭력을 모두

해결하려는 시도”(심영희 2005, 53), “적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착취로 인한 가난, 군비경쟁과 군사주의 문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소외 등의 구조적, 잠재적 폭력에 대한 반대까지 포함”(정현백 2021, 192),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 인권, 빈곤, 성차별, 인종주의의 극복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이 보다 전면에 등장해야”(정현백 2005, 75) 등에서 한국여성평화운동에서 인식하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에 관한 해석도 제각각이며 개념도 모호하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이들의 탓이라기보다는 적극적 평화 개념이 가진 방대한 포괄성과 복잡성, 모호성, 추상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갈등이 제시한 폭력개념에는 인간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는 개인, 집단, 제도 수준의 물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불평등과 부정의가 거의 모두 포함되며, 이를 다양한 비폭력적 수단으로 제거하는 것이 적극적 평화가 된다. 적극적 평화의 개념은 사회를 비판하는 인식론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실천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 개념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이 방향성의 문제에 매번 직면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갈등의 ‘구조적 폭력’ 개념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계속되어 왔다. 구조적 폭력 개념이 부정의와 불평등, 차별과 재난 등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기에는 모호하고 학문적 분석에 유용하지 못하며, 평화연구에서 전쟁을 지워버림으로써 실천적 성격을 잃었다(이동기 2022)는 비판에서부터 적극적 평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파악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도 어렵다는 비판(구갑우 2008; 김동진 2013, 이상근 2015 재인용), 구조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는 모델이 아니라 메타포라는 비판(Boulding 1977) 등이 있다. 특히 적극적 평화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이것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너무 많은 과제가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망각하거나 중요한 문제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이상근 2015, 136)은 여성평화운동이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여성평화담론과 운동은 ‘적극적 평화’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에서 벗어나 실천과 대중화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평화담론의 수용과 한국적 특수성에 민감한 평화담론과 운동의 방향성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Ⅲ. 로컬의 포용과 평화

다 수준의 다양한 평화 행위자의 역할과 상향식 평화 접근방식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 담론과 로컬 행위자를 평화만들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지역적 전환(the local turn)’ 담론 혹은 ‘로컬평화’ 담론이 대안적인 평화 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담론 모두 다양성과 맥락적 특수성, 구성물로서의 평화, 상향식 평화 접근 등에 가치를 두고 있다.

레더라크(John Paul Lederach)는 ‘정의로운 평화’를 역동적 사회구성물로, 폭력과 파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순환을 감소시키며 동시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의를 증가시키는 접근법으로 설명한다. 사회들 사이에 그리고 사회 내부에서의 ‘정의로운 평화’ 프로젝트는 공식적인 평화 협약의 전·후 과정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활동 및 역할과 연관된다. 이 프

로젝트는 테러 집단에 대항한 유엔의 제재 수행, 제재 대상이 된 나라의 인권, 경제 발전, 거버넌스 기능 향상 등과 연관되며,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평화구축 사고 형성에서의 종교적 행위자의 관여 등을 포함한다(UNESCO 2018, 31).

레더라크는 냉전 시기와 탈냉전 이후 지금까지의 무력갈등은 대부분 가난한 개발도상국 영토에서 발생했으며, 상당수의 전쟁이 평화적 결론에 도달했지만, 다시 새로운 전쟁이 나타났으며, 민족 갈등과 같은 정체성 집단 사이의 갈등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무력 갈등이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갈등집단의 적대감, 증오, 뿌리 깊은 공포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레더라크 2012, 22-30).

따라서 레더라크는 새로운 의미의 ‘평화구축(peacebuilding)’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화구축’은 평화조약 이후에 진행되는 재건 사업을 의미하는데, 레더라크는 갈등을 좀 더 지속 가능하고 평화적인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화조약 이전과 이후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행위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레더라크 2012, 44-46). 레더라크는 소규모의 무력 갈등, 중간 규모의 무력 갈등, 전쟁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갈등²⁾에서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 모두를 통합하여, 풀뿌리 지도자, 고위층 지도자, 중간 수준의 지도자가 담당해야 할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역할을 지적한다. 고위층 지도자들은 피스메이커, 혹은 중

2) 피터 월렌스틴(Peter Wallensteen)과 캐린 액셀(Karin Axell)은 냉전 말기와 냉전 종식 초기 출간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사망자 수, 지역적 특성, 갈등의 쟁점을 기준으로 ‘소규모의 무력 갈등’, ‘중간 규모의 무력 갈등’, ‘전쟁’으로 무력 갈등의 세 가지 하위 범주를 구분하였다. ‘소규모의 무력 갈등’은 1년 동안 사망자 수가 25명을 넘지 않으며, 적어도 하나의 갈등집단이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간 규모의 무력 갈등’은 갈등의 전체 진행 과정 중 적어도 1천 명이 사망하고, 특정 한 해 동안 2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이다. ‘전쟁’은 1년 동안 적어도 1천 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가 해당한다(Wallensteen and Axell 1993, 331-346, 레더라크 2012, 20-21 재인용).

재자나 조정자의 역할을, 중간 수준의 지도자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갈등 해소 트레이닝과 평화위원회 활동 등을, 풀뿌리 지도자는 지역 사회 및 마을 수준에서 평화와 갈등 해소 문제를 다루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구축’은 세 가지 수준의 행위자가 장기적 비전과 계획, 전략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과정인 것이다(레더라크 2012, 66-109).

‘정의로운 평화’ 담론은 국제적 행위자와 개별 국가의 상층부 중심의 외재적·하향식 평화구축 접근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분쟁 지역의 로컬행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평화구축의 내용과 방식을 생산하고 실행함으로써, 실제 지역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가며 지역 평화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향식 접근법과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포용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평화’ 담론과 유사한 입장으로 ‘지역적 전환(the local turn)’ 혹은 ‘로컬평화’ 담론이 있다. 로컬행위자가 평화구축의 기획과 의사결정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평화구축의 로컬 오너십(local ownership of peacebuilding)’에 기초하여, 평화구축 과정에서 로컬행위자와의 협력이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역적 전환’의 아이디어는 로컬행위자의 자기주장이 활발해지는 상황과, 국제적 평화 지원 행위자들이 신뢰를 잃은 상황이 맞물리며, 평화구축, 국가재건과 발전프로젝트는 주체를 외부에서 규정하기보다는 내부의 주체를 지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하향식 접근을 채택한(국제적) 평화구축 행위자는 자신들의 방법, 목적과 규범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 틀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로컬행위자가 평화구축의 기획과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인 평화구축의 핵심 조건이라는 것이다(UNESCO 2018, 33).

로컬평화이론의 대표자인 진티(Roger Mac Ginty)는 냉전 시대 이후

주요 강대국과 이들이 실행을 위임한 국제기구가 평화구축의 핵심 행위자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된 주류 ‘자유주의적 평화구축’은 국제적 행위자가 주도하며 국가 단위를 정치 및 경제 사업의 주요 단위로 설정하였다. 평화협정은 새로운 헌법의 형태로 도입되었고, 평화구축을 위한 개혁 조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국가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냉전 이후 20년 동안 평화구축은 ‘덴마크에 도달하는 것’에 비유되었다. 즉 안정적이고, 민주적이며, 순응적이고, 경제적으로 개방적이며 국제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은 국가의 수립과 동일시되었다. 로컬은 평화의 조성, 유지, 중재의 역할에서 제외되었으며, 국가와 국제기구, 국가 간 연합 등이 평화구축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Ginty 2015, 844-845).

그러나 비판적 평화학파는 ‘자유주의적 평화’가 평화구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행위자를 배제하는 동시에, 자유주의적 수사를 이용해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비자유주의적 수단과 결과를 용인해왔다고 비판한다. 또한 이들은 ‘자유주의적 평화’가 지구적 정치경제 체계와 식민지 착취가 초래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전했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자유주의 방식의 평화 프로젝트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역설하지만, 지구적 불평등 문제는 간과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평화 관점은 평화구축을 분쟁 사회에 잘 맞지 않는 서구식 국가만들기와 (신)자유주의 규범을 이식하는 기회로 이용하였다는 것이다(Ginty, Richmond 2013, 767-768).

리치몬드(Oliver P. Richmond)는 ‘자유주의적 평화(liberal peace)’가 레토릭과 실행에 있어서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이유를 자유주의적 평화 프레임 안에 승자의 평화, 제도적 평화, 헌정적 평화, 시민적 평화라는 상이한 평화관의 공존에서 찾는다. 첫째, ‘승자의 평화(victor’s peace)’ 입장은 오래된 현실주의 입장으로 평화는 군사적 승리자에게 달려 있으며, 또한 평화는 승자의 평화의 지배가 지속되는 한 가능하다. 둘

째, ‘제도적 평화(the institutional peace)’는 이상주의, 자유주의 국제주의, 자유주의 제도주의의 입장으로 국가 간 다자 합의로 만들어진 규범과 법을 통해 평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입장은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부터 유엔의 창설에 이르는 사상의 흐름이다. 셋째, ‘헌정적 평화(the constitutional peace)’는 자유주의적 칸트주의 입장으로 평화는 민주주의, 자유무역, 인권 등의 가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근대부터 냉전 시기, 탈냉전 시기까지 유럽 평화조약에서 반복되었다. 넷째, ‘시민적 평화(civil peace)’ 입장은 평화는 국가행위자 혹은 국제적(다자적) 행위자가 아닌 개별 행위자의 주체성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은 시민 직접행동, 시민운동, 인권운동, 노예무역종식 운동, 국제관계에 시민사회의 포함 등이 해당되며,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둔 자유주의 사상, 구성주의, 비판주의, 포스트구조주의의 입장이며, 이들은 헤게모니와 지배, 자아-타자 관계, 정체성, 특수주의와 다원주의, 인간안보, 초국적 정의(justice beyond states-systems) 등을 강조한다(Richmond 2006, 293-294). 리치몬드 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평화의 측면들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보완적인 특징을 보이며, 각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승자의 평화는 승자의 의지와 능력에 의존해야 하며, 시민적 평화는 여론의 무게를 감당해내기 어려우며, 제도적 평화는 합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헌정적 평화는 권력 공유를 거부하는 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Richmond 2006, 294).

자유주의적 평화의 하향식 평화접근법은, 이상주의와 인도주의적 개입의 방식으로 평화를 창출하고, 현실주의 군사전략을 채택한다. 자유주의적 평화는 시민적, 헌정적, 제도적, 승자의 평화 사상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수주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Richmond 2006, 340).

자유주의적 평화 접근법의 하향식 평화만들기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구체적으로 2005년 이후 강대국과 국제기구의 평화구축이 실패하며 ‘로

결의 재발견'이 진행되었다. 부분적으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개입 이후 평화구축 및 국가재건에 엄청난 물량을 투입했지만, 종전 이후에도 그 지역은 여전히 군사적 긴장과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주의적 평화 패러다임은 북반구의 정치양식을 지향하고 국제적 경계를 존중하며 안보를 강조하는 '작은 서구국가'(Mini-Me states)를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평화조약 이후 이들 국가는 무자비한 지구시장에 무방비 상태이며, 평화 속에서 엘리트 간 협상의 결과물로 국제 지원은 지속되지만, 지역주민 대다수는 소외되는 '질 낮은 평화'(a poor quality of peace)의 상황에 놓여 있다(Ginty 2015, 845).

그렇다면 새로운 평화만들기의 주체이자 접근방식으로 등장한 '로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에 로컬은 항상 '문제 거리'로 해석되었다. 로컬은 낙후되고, 특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이며, 분쟁과 저발전의 장소(place)로 평가되며, 외부의 개입을 통해서만 발전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로컬을 장소(place)가 아닌 탈영토적 관점(post-territorial view of locality)에서, '활동성/활기'(activity)로 해석할 수 있다(Ginty 2015, 849-850). 로컬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일상적 행위와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며, 응답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사회구성물이라는 것이다. 개인과 커뮤니티는 일상적 활동을 통해 로컬과 일터, 네트워크에서 평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초국적 정치경제를 운영하고, 사상을 전파하고 사람과 운동을 동원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능력이 있다. 로컬 수준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폭력과 배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로컬은 화해시키고, 안정시키고, 협상하고, 저항하고, 평화를 만들고, 갈등과 불평등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Ginty 2015, 848-850). 로컬은 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채택하는 신념과 실천으로 이루어진 체계인 것이다. 신념과 실천은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이 관점에서 로컬은 영토적 특성

을 가질 수 있지만 영토를 초월할 수도 있다. 소규모의 친밀한 공간부터 초국적 네트워크, 아이디어의 집합, 소속감을 포괄할 수 있다(Ginty 2015, 851). 따라서 로컬은 문제 거리가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예측하며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가진 자원인 동시에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Ginty 2015, 847-848). 로컬은 살아 움직이며 구성과 재구성을 반복하면서 체감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평화만들기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로운 평화’ 담론과 ‘로컬평화’ 담론의 공통점은 ‘로컬의 행위와 행위자’를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외부에 존재하는 국제적 행위자의 관점으로 평화만들기의 레토릭, 의미, 내용, 정당화가 진행되고, 방향이 규정되는 평화 접근법은 실제 구성원의 삶과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외부적 접근법(external approach)이 아닌 일상의 행위와 네트워크를 통해 역동적으로 구성되고 ‘로컬’의 눈으로 내용과 의미, 정당성을 만드는 내부적 접근법(internal approach)이 실질적인 평화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다³⁾.

여성평화운동 역시 ‘로컬’의 목소리와 행위자에 주목하여 새로운 의제와 활동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로컬은 문제를 발굴하고 해석하고 실제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상을 형성하여 전파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소수의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집단이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여 명망가들이 전통적인 평화구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법적, 제도적 성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행위하고 상호작용하는 로컬에서 내재화되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활동의 성과는 지속될 수 없

3) 최근 국내에서도 일상적 평화(everyday peace), 로컬평화를 강조하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일상적 평화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평화적 관행과 사고방식에 주목한다. 기존 평화 논의에서 분쟁과 갈등의 피해자로만 여겨졌던 평범한 사람들을 평화구축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홍용표, 모춘홍 2023, 13-14; 강혁민 2022; 허지영 2021).

다. 여성평화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운동의 침체 원인 중 하나로 평화주제를 일상적 삶의 문제로 연결시켜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난민과 이주민 등으로 연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김귀옥 2022, 103)을 느끼고 있다. 적극적 평화 담론은 사회의 모든 부정의와 불평등 의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쟁하라고 말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평화의 의제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외부에서 주어진 이론이나 담론이 말해 줄 수 없으며, 로컬과 대화하며, 로컬의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포함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컬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수한 맥락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IV. 한국적 특수성 : 통일 정서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평화의 목소리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은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여성평화운동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두 가지의 대표적인 구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영희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 그리고 하버마스의 체계/생활세계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을 통일/남북여성교류운동, 반전/군축/국제연대운동, 여성인권운동, 평화교육/평화문화운동의 4가지로 구분한다. 통일/남북여성교류운동에는 북한여성돕기 운동, 남북여성교류, 법 정책개선 운동, 통일교육운동이 포함된다. 반전 군축 국제연대운동

은 원폭피해자지원운동, 반전반핵운동,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최루탄 추방운동, 방위비 삭감운동, 군예산집행 감시운동, 걸프전 반대운동, 9.11 이후 아프간,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 등이 포함된다. 여성인권운동은 분단의 피해, 산업화로 인한 여성인권 침해에 대응한 기생관광반대운동, 여성노동운동, 정신대 대책활동, 기지촌 운동, 군가산점제 운동이 해당 된다. 평화교육/평화문화운동에는 원폭피해자돕기와 반핵평화운동을 위한 교육과 홍보, 여성통일운동과 통일교육, 여성평화교육과 갈등해결훈련, 여성들 간의 남남갈등 해소 등이 포함된다(심영희 2005, 11-61).

김엘리는 여성평화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평화담론은 안보담론에 가까운 국가의 평화담론과는 구별된다고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평화담론은 전쟁의 부재가 평화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구조적 폭력의 해체를 목적으로 하고, 구조적 폭력을 초래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운동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운동 현장에서는 구조적 폭력을 초래한 주체가 국가냐, 자본이냐, 분단구조에 의해 야기된 민족문제냐에 따라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관계가 설정되고, 평화운동의 방향과 중점이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김엘리는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이 분화되는 기점을 9.11테러라고 지적한다. 90년대의 여성평화운동이 분단, 자본, 국가의 문제들을 아우르며 ‘여성주의’를 표방했다면, 9.11테러 이후는 다양한 여성들의 위치와 정치적 관점이 다른 여성 주체들이 등장하며 평화운동이 세분화되었다는 것이다. 분단구조와 평화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분단과 통일 사안과는 거리를 둔 입장, 분단구조로 야기된 사회적 문제를 의식하지만 평화를 상위의 가치로 둔 입장, 민족적 통일문제에 중점을 둔 입장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김엘리 2010, 148-150).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에 관한 이러한 구분과 내용을 비교하여 종합해보면, 여성평화운동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핵심적인 축을 이뤄온 영역은 분단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에 주목한 ‘여성통일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또 다른 축은 통일운동과는 거리를 두면서 전쟁의 피해자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공감과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군축 및 반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축의 여성평화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 로컬의 정서와 관심사에 민감한 운동 방향성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로컬 즉 평범한 사람들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관심과 내용을 많이 달라져 왔다. 민족의 동일성 회복과 한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인식은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사회의 안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평온한 일상적 삶이 지속될 수 있는 평화 상태의 유지에 관한 관심과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일의 의미도 남북한 경제적 통합이나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 문화교류로 인식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3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감소하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20대 28.2%, 30대 34.0%, 40대 42.3%, 50대 51.9%로, 20대와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3.8%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와 관련하여서도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30.6%이고, 반면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이 38.9%로, 민족주의적 당위보다 전쟁 위협과 같은 현실적 이유가 통일의 중요한 이유로 부각하고 있다(김범수 2023, 54-55). 또한 ‘남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통일로 인식한 비중은 59.8%로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남북한 경제협력(12.3%)’, ‘인적·물적 자유 왕래(22.5%)’, ‘문화교류(5.4%)’를 통일로 인식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대북정책의 목적으로 통일 선호는 14.6%인데, 평화공존 및

평화정착이 65.1%로 압도적으로 높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공동체통합이 20.1% 등을 차지하면서 통일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음이 확인된다(김범수 외 2023, 198-199).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19%로 역대 최저치이며,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비율이 62.5%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김범수 외 2023, 200). 민족적 정체성과 동포애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고 통합하기 위한 특수한 지원이나 배려를 오히려 역차별로 받아들이며,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도 결혼 이민자,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난민 등과 같은 이주민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의식의 변화에 민감한 평화운동도 새로운 의제 개발과 연대 주체의 확대와 포용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평화운동을 포함하여 한국의 주류 여성운동 진영은 한국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난민 등의 포용과 연대 활동에는 소홀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대책 활동이나 동북아 평화를 위한 활동, 전시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에 있어서 활발한 국제적 연대 활동을 펼쳐 온 것과는 달리, 한국 사회 로컬의 주민으로 존재하는 이주민과 난민 등의 인권 증진 활동에는 소극적이었다. 초국적 연대의 시작은 로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 인종, 국적 등 차이를 가진 사람들의 일상적 평화를 지원하는 일에서부터 그들의 모국의 평화를 위한 연대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주와 다양성 시대의 로컬평화와 이주민권운동을 평화의 도구로 제안하며 이주와 이주민의 이슈를 평화의 주제로 연결하는 ‘이주평화학’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이주민과의 친근감과 비교해보면, 미국인(39.6%) > 동남아시아인 및 남아시아인(31.4%) > 일본인(22.3%) > 조선족(21.1%) > 북한이탈주민(19%) > 고려인(14.7%) > 중국인(11.4%) > 중동인(6.8%) 순서로 나타났다(조현주 2023, 113).

을 구상하여, 로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와 난민이 공적 시선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온 과정과 그러한 현실에 맞선 저항과 연대를 평화의 문제로 주제화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한준성 2022)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평화운동은 한국 사회의 로컬 수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이민자 등의 목소리와 활동을 포용하는 연대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 지구적 차원의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역사로 인한 지구적 차원의 권력 불평등, 자원의 불평등, 문화의 불평등, 전쟁, 집단학살, 정치적 억압 등으로 인해 생존과 평화를 찾아 지구 반대편 로컬에서 또 다른 로컬로 이동해 온 주체와 그러한 로컬과의 대화에서 평화의 의제와 방향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대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페미니즘 운동과 학문 분야에서 발전해 온 ‘교차성(intersectionality)’⁵⁾ 접근법이 유용하다. ‘교차성’ 개념은 미국의 급진적 흑인 페미니스트들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흑인 여성이 성차별주의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에 의해서도 차별과 불평등, 불이익을 경험하는 교차적인 상황이 간과되기 때문에, 흑인 여성의 경험이 미국 주류 페미니즘 의제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비판하였고, 이를 위한 비판적 도구로 ‘교차성’ 개념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페미니즘 학문과 운동이 이러한 교차성 접근을 점차 수용하였고, 미국의 #미투운동과 #타임즈업 운동의 핵심 가치로서 기능하며 다양한 권리와 이슈를 포용하는 접근 방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백미연 2019). 교차성 접근법은 사회의 다층적으로 주변화된 주체들의 경험이 배제된 것을 부각하며 그들의 특별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교차성 접근을 통해 미국의 여성운동은 ‘배제의 정치’ 혹은 ‘빨셈의 정치’가

5) ‘교차성’은 법이론가인 크렌쇼(Kimberle Crenshaw)가 가정폭력 사례를 통해, 흑인여성 이 법적·제도적 삶에서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를 복잡하게 경험하는 상황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처음 규정되었다(Crenshaw 1989, 백미연 2019, 78 재인용).

아닌 ‘포용의 정치’이자 ‘덧셈의 정치’로 갈 수 있는 연대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여성운동은 상층부 정치(high politics)과정의 포함과 참여 확대에 관심이 많은 올드 페미니스트 중심의 자유주의 중산층 여성운동이나 일상에서의 생존에 관한 관심 특히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이슈를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영영페미니스트⁶⁾ 등 대다수 여성운동이 ‘교차성’의 가치보다는 서로 다른 ‘자매애’를 추구하며, 배제의 정치를 하고 있다. 여성평화운동 역시 피해자로서의 여성 이슈에는 주목하면서도 그 이외 주변화된 집단의 이슈는 아직 포용하고 있지 못하다. 일본군 위안부, 기지촌 여성 등 전시폭력의 피해자로서의 여성 집단의 이슈에 집중해오며, 이주민, 난민, 북한 이탈주민 등의 이슈를 적극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로컬과의 대화와 로컬 주민 주체의 포함을 통해 다양한 평화의 목소리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로컬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개별 로컬행위자의 모든 이해와 경험, 관점을 무차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로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대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는 ‘종속과 지배, 주변화의 경험(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원칙(all-subjected principle)’⁷⁾이 리트머스시

6) 필자는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10대에서 30대 여성청년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스트를 영영 페미니스트(김영선 2022)로 지칭한다. 이들의 입장은 온라인 페미니즘(김애라 2019; 김은주 2019), 디지털 페미니즘(김보명 2018; 추지현 2019), SNS 페미니즘(김지효 2021) 등으로 불리며, 래디컬 페미니즘의 운동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7) ‘종속된 사람들의 포용 원칙(all-subjected principle)’은 비판사회철학자이자 여성주의 철학자인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가 강조하는 정의의 범위를 규정하는 원칙이다. 일단의 사람들은 관련된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거버넌스의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에 기초하여 평등한 고려를 요구할 정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구조는 국민국가(영토국가)의 틀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상호작용을 구조 짓는 강력한 규칙을 만들어내는 비정부조직까지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 정의의 범위는 국경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종속과 지배라는 기준에 따라 지방, 국가, 지역, 지구 수준으로 다양화될 수 있다(Fraser 2008, 64-66; 백미연 2017, 20-21 재인용)

협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로컬평화와 일상적 평화담론의 수용을 통해, 통일을 이루는 정치적 과정으로만 이해하는 평화에 대한 협소한 인식을 넘어 평화의 개념적 확장과 다양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 평화 담론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열과 대립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적 행동과 사고방식에 관한 논의는 평화 논의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허지영, 2021). 특히 남북여성교류를 추구해왔던 여성평화운동은 한국의 로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촉진하여 평화의 행동과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탈북여성인 북한이탈주민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남북여성교류와 평화협력과 같은 초국적 연대 활동은 로컬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탈북민은 한국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미권, 유럽, 아시아 지역의 로컬에 물리적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 간의 초국적 네트워크는 초국적 평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자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로컬평화의 관점에 서면 난민의 문제는 평화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1994년부터 2024년 12월 누적 국내 난민신청 건수는 122,095건이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544명, 인도적 체류자 인정은 2,710명이며, 누적 난민인정률은 2.7%이다(법무부 보도자료 2025. 2. 3.).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은 24.8%, 보호율은 63%에 달한다(한겨레신문 2023. 7. 1.). 이는 한국사회의 난민 문제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난민은 위협스럽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아니 보이지 않는 사람들(invisible people)이다. 전쟁과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등의 이유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목소리와 대화는 평화가 무엇이고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다.

V. 한국적 특수성에 민감한 한국여성평화운동을 향하여

한국전쟁과 70년의 분단 상황은 한국적 특수성이다. 하지만 분단의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과 통일에 대한 인식, 평화에 대한 인식 등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로컬행위자의 행위와 소통, 실천을 통해 변화한다.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것도 변화하는 것이다. 동족상잔의 비극과 이산가족의 고통에 공감하며 통일을 통한 한민족 정치공동체의 실현을 염원하던 로컬의 정서는 변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치적 통일이 아닌, 남북한 경제공동체, 남북한 자유로운 왕래와 소통, 문화교류 등과 같은 경제적 통합, 문화적 교류를 통일로 바라보는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전 지구적 불평등과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의 확산, 전쟁 등으로 시작된 이주의 물결로 로컬은 다양성이 넘쳐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역압이 새롭게 등장하고 이에 대한 저항의 물결도 존재한다. 한국적 특수성은 또 변화할 것이다.

평화의 주제와 활동 방식은 로컬과의 활발한 대화와 상호소통을 통해 구성되고 다시 구성되고 변화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위한 의제와 분야를 미리 정해 놓고 운동을 조직하는 방식은 평범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상의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에 대한 최소주의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 ‘종속을 받는 사람들의 포용 원칙’을 통해, 다양한 개인과 집단, 공동체를 포함해나가는 과정이 평화를 위한 연대의 정치과정이며, ‘평온한 삶의 유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포함해가는 과정 또한 평화를 위한 연대의 정치과정일 것이다. 평화의 연대 구상은 배제의 정치가 아닌 포용

의 정치(politics of inclusion)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평화운동은 지난 30년 동안 지도자들과 활동가의 헌신을 통해, 평화운동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쳐왔고 많은 성과를 내왔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 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해 담론과 운동의 방식도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불명확한 적극적 평화 개념에 매달려, 모든 주제를 포괄하는(catch-all) 방식이나 전쟁의 피해자로서의 여성이라는 담론에 의존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학자나 활동가가 평화의 방식과 방향을 알고 있다는 ‘철학자의 관점’이 아닌 로컬의 실제 행위자를 그 과정에 적극 포용하여 대화하며 운동의 주제와 방식을 함께 만들어 가는 ‘민주적 관점’이 필요한 때이다. 로컬평화의 담론은 ‘평화운동의 민주화’인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없다’는 낡은 ‘민주적 평화’가 아닌 ‘로컬이 묻고 로컬이 답하는’ 진짜 민주적 평화가 필요한 것이다.

(2025년 3월 13일 접수, 5월 13일 심사완료, 5월 13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김귀옥. 2022. “시민사회와 여성주의 평화·통일담론의 소통과 공감의 노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례를 통한 성찰.” 『여성과 평화』. 7. 90-124.
- 김범수. 2023. “통일에 대한 인식.” 김범수 외 편. 『2023 통일의식조사』.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범수 외. 2023. 『2023 통일의식조사』.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보명. 2018. “페미니즘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사회』. 118. 100-138.
- 김상래. 2021. “한국의 평화 연구 동향: 명칭에 ‘평화’가 포함된 KCI등재학술지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2(1). 49-74.
- 김영선. 2022.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여성학의 도전과 새로운 실천.” 『현상과 인식』, 봄호. 77-94.
- 김애라. 2019. “‘탈코르셋’, 켄레디위드미(#getreadywithme): 디지털경제의 대중화된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35(3). 43-78.
- 김은주. 2019. “제4물결로서 온라인-페미니즘: 동시대의 페미니즘의 정치와 기술.” 『한국여성철학』. 31. 1-32.
- 김엘리. 2010. “여성과 평화의 불완전한 조우와 성격.” 『여성과 평화』, 5. 143-169.
- 김지효. 2021. “페미니스트 ‘들’의 인스타그램: 디지털 평판과 SNS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37(4). 119-154.
- 김태균. 2021. “평화구축과 국제개발: 단계적 결합과 결합의 포용성.” 『인간과 평화』. 2(1). 147-173.
- 레더라크, 존 폴. 김동진 역. 2012.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후마니타스.
- 법무부.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2025. 2. 3.
- 백미연. 2017. “동북아 연대와 협력의 패러다임 구성: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6. 324-364.
- 백미연. 2019. “한국미투운동 이후 페미니즘 정치의 전환: ‘연대의 정치’를 향하여.” 『한국정치사상연구』. 25(2). 68-92.
- 서보혁. 2019. 『한국 평화학의 탐구』. 서울: 박영사.
- 서보혁·정육식. 2016. 『평화학과 평화운동』. 서울: 모시는사람들.

- 심영희. 2005. “한국여성평화운동의 흐름과 과제.” 심영희·김엘리 편. 『한국여성평화운동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11-61.
- 심영희·김엘리. 2005. 한국여성평화운동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 이동기. 2022. “‘빙산’에서 ‘일각’으로: 요한 갈통의 ‘구조적 폭력’ 개념 비판.” 『평화들PEACES』, 창간호. 65-99.
- 이상근. 2015. “‘안정적 평화’ 개념과 한반도 적용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9(1). 131-155.
- 조원준. “사람답게 살려고 왔지만 난민 인정률 2%...차갑게 밀쳐낸다.” 『한겨레신문』. 2023. 7. 1.
- 조현주. 202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김범수 외 편. 『2023 통일외식조사』.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정현백. 2005. “여성통일운동의 역사.” 심영희·김엘리 편. 『한국여성평화운동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62-101.
- 정현백. 2021. 『연대하는 페미니즘』. 파주: 동녘.
- 추지현. 2019. “페미니즘 ‘들’: 변화, 위해, 소통의 경험들.” 『여성학논집』, 36(1). 59-91.
- 한준성. 2022. “평화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주정치: ‘이주-평화 연계’에 기반한 이주정치의 모색.” 『평화들PEACES』, 창간호. 37-64.
- 허지영. 2021. “일상적 평화: 미시적 평화담론의 한반도 적용과 의의.” 『통일과 평화』, 13(2). 79-114.
- 홍용표. 2018. “평화문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한국에서의 의미와 과제.” 『문화와 정치』, 5(2). 5-30.
- 홍용표·모춘홍. 2023.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평화연결.” 『문화와 정치』, 10(1). 5-27.
- Fraser, Nancy. 2008.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Polity Press.
- Galtung, Johan.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67-191.
- Galtung, Johan. 1990.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27(3).

291-305.

Galtung, Johan.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Oslo: PRIO.

Ginty, Roger Mac. 2015. "Where is the local? Critical localism and peacebuilding." *Third World Quarterly*. 36(5). 840-856.

Ginty, Roger Mac and Richmond, Oliver P. 2013. "The Local Turn in Peace Building: a critical agenda for peace." *Third World Quarterly*. 34(5). 763-783.

Lederach, John Paul. 1997. *Peace Building: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Richmond, Oliver P. 2006. "The problem of peace: understanding the 'liberal peace'."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6(3). 291-314.

UNESCO. 2018. *Long Walk of Peace: Toward a Culture of Prevention*. Paris: UNESCO.

Abstract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the Korean women's peace movement discourse

*Baik, Mi Youn**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s of the crisis of the Korean women's peace movement from a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and seeks a direction for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peace. To this end, it critically reviews the positive peace discourse adopted by the Korean women's peace movement and proposes the ideas of 'just peace' and 'local peace' as alternative peace discourses. It also critically examines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elite-centered, top-down women's peace movement approach and the lack of inclusion of diverse women and peace voices, and argues for the necessity of inclusive solidarity politics through dialogue with locals and the inclusion of local subjects. It proposes a 'democratic perspective' and 'democratization of peace movement' that actively embraces locals and diversity in the process of creating peace, rather than a 'philosopher's perspective.'

* Research Fellow. Gyeonggido Women&Family Foundation.

Key words : Korean women's peace movement,
peace-building, local peace, inclusive solidarity,
democratization of peace.